

“포장 뜯으면 비닐 한무더기 생겨”

재포장 금지제 두고 ‘혼선’...“영업 자유제한” 반발 “왜 소비자만 고생해야하나...업체들이 노력해야”

국내 식품·유통업계의 과도한 포장은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미 악명이 자자하다. 과자 봉지 안에 질소의 비중이 정작 과자보다 훨씬 많다는 의미를 풍자한 “질소를 샀는데 과자 부스러기가 들어 있다”는 우스갯소리는 익숙해진지 오래다.

대형마트에서 행사 상품이 과다하게 포장되는 사례도 우후죽순격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선 장을 본 뒤엔 다량의 포장 비닐과 박스를 버려야 한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도 식품·유통업계의 ‘1+1 포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재포장 금지제도 마련에 나섰다. 관련 업계와의 의견 조율에 애를 먹는 모습이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포장제품을 여러개 묶어 비닐로 또 감싸는 ‘재포장’을 금지하는 제도와 관련해 산업계·소비자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체 첫 회의가 오는 10일 열린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재포장 금지 관련 시행규칙(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기로 했

지만, 업계 혼선이 빚어지자 내년 1월로 적용시기를 미뤘다.

환경부는 이번 재논의 과정을 거쳐 재포장 금지제도 관련 업계 가이드라인(지침서)을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재포장 예외 기준’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불가피한 경우까지 재포장을 금지해 부작용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협의체의 재포장 기준 논의가 쉽지 않은 양을 전망이다. 재포장이 식품·유통업계의 관행으로 자리잡아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을 금지해 제조·유통업체들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상품 결정권을 제한하기보다, 친환경 포장재 사용과 분담금을 통해서 ‘재포장 줄이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포장의 기준 자체가 분명치 않다보니 업계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재포장의 기준을 ‘바코드’로 구분하려 했으나 유통단계에서 바코드를 스티커로 인쇄해 제품 겉면에 쉽게 붙일 수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묶음포장 제품이 판매되는 모습.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가격할인’ 등과 같은 관측행위를 재포장의 기준으로 업계에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누가 봐도 재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호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며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기업들이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환경부도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의체 논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는 재포장 금지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업계와 자발적인 포장재 감축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

구적으로는 포장 폐기물이 급증했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포장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유통업체 제조업체들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지난 10년간 생활 폐기물은 10% 늘었고, 포장재는 100%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 작년에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비자들만 고생해야 하는지는 비판이 나왔다”며 “결국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선 생산자와 판매자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호 기자

사업 명목 6억 가로챈 유명 야구인 아들 구속

유명 야구인 아들이 지인을 상대로 야구공 공급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수 억원대를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던 피해자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 남성)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피해자 B씨 등 일가족 3명에게 야구공 공급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약 6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가족 3명 가운데 한 명은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고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생이 SNS에 자랑한 금팔찌 뺏은 동네 형들

평소 차고 있던 금 100돈짜리(시가 2700여만 원 상당) 팔찌를 SNS에 올려 자랑한 중학생을 불러내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6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A군(19)과 B군(19), C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오전 3시께 인천 연수구 연수동 D군(15) 거주지 인근에서 D군을 불러내 협박과 폭행 후 금 100돈(시가 2700여만 원 상당) 팔찌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 D군이 자랑삼아 SNS에 올린 금팔찌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3명 중 1명이 D군과 알고 지내고 있는 점을 이용해 D군을 불러내(D군이) 차고 있던 금팔찌를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후 한 금은방에 해당 금팔찌를 팔아 2700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터널 입구서 SUV 2대 충돌...2명 부상

5일 오후 9시20분쯤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운산터널 입구에서 코란도가 쏜렌토를 들이받았다.

코란도에 부딪힌 쏜렌토는 램프 회전구간 경계석을 넘어 산 방향으로 올라가 전도됐다.

사기로 쏜렌토에 타고 있던 운전자 A씨(50대 여성)와 동승자 B씨(30대 여성)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화동IC와 운산터널 합류지점에서 진입 방향을 헛갈려 서행하던 코란도가 선평-구서 IC 방향으로 가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던 쏜렌토를 보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60대 부부 거주 아파트서 불...남편 숨져

충북 청주 아파트에서 불이나 60대 부부 중 한명이 숨지고 한명이 다쳤다.

5일 오후 7시49분쯤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의 한 아파트단지 7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남편 A씨(60)가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안방 화장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 B씨(59)도 얼굴 등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이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인과 피해규모 등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펜션 수영장 1.2m 높이서 다이빙한 30대 의식불명

인천 영종도에 놀러왔던 30대 남성이 펜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6일 인천 영종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7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펜션 수영장에서 A씨(31)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옮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친구들과 영종도 한 펜션에 놀러왔다가, 3.5x6m 규모의 수영장에서 물놀이 중 1.2m 높이에서 다이빙을 했다.

손정우 美송환 ‘불허’ 이유는...“웰컴 투 비디오 발본색원”

“인도하지 않는 게 아동 음란물 관련 범죄 예방에 도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가 미국 송환이 불허된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W2V)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이 손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W2V’ 관련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나아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를 예방·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재판부는 “미국이 손씨를 인도받아 자국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이익이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경우가 더 시급하고 중대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6일 오전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열

고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인도범죄의 처벌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보증이 있는지 △손씨가 인도범죄(범죄수익은닉)를 범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손씨의 국적·범죄장소·범죄성격 등에 비춰 손씨를 미국에 인도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에 담겨 있어 별도의 보증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손씨가 범죄수익은닉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개연성도 있다면서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인 인도제

도의 취지, ‘피청구국(한국)이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정한 한미간 범죄인 인도조약, 범죄인 인도법상 임의적 거절 사유 중 하나인 ‘대한민국 국민’인 점 등을 고려해 손씨를 송환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면서 “범죄인 인도 거절이 형사관할권의 합리적 배분과 한미간 조약의 취지에 한저히 반하는 재량 행사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W2V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범원의 결정에 따라 손씨는 이날 오후 12시5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최이슬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

준솔루션